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 미래첨단산업

# 첨단산업 육성, 미래 산업지도 바꾼다

지난 4월 26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한지 100일이 되었다. 1월 18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자 전복이 잘하는 일들과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먼저 시도하고 도전하겠다는 특례를 담았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은 오는 12월 27일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기동 준비를 마쳐야 한다. 출범 100일을 맞아 특화산업 중심으로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번에는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첨단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는 첨단산업 육성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존 1차 산업 중심에서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경제 등 첨단산업으로 경제 전환을 통해 자본과 사람, 인프라가 모이는 글로벌 생명경제의 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에 역량 집중**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건 단연 이차전지 산업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월)을 전후하여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의 도내 투자는 9조 3천억원에 육박한다. 연이은 대규모 투자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산업 용지는 올 상반기에 조기 분양을 눈앞에 두었다. 전북자치도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운영, '이차전지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등 특례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말까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365억원)'와 '사용후 이차전지센터(360억원)' 등 2개 이상의 테스트베드 유치로 목표로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R&D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등 입주기업을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개선·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이차전지 기업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첨단전략 바이오 특화단지 도전**  
바이오 융복합산업은 풍부한 생물자원을 바탕으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 첨단전략 바이오 특화단지에도 도전하고 있다. 지역 바이오 기관, 글로벌 R&D 기

### 이차전지 특화단지 이어 올해 바이오 특화단지 도전 수소경제 전환 국책 대응·무인이동체 시험장 밀그림

관과 2개 거점병원 그리고 대학, 기업 등과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연이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소재, 천연물, 미생물 등 지역 특화산재를 활용하고 첨단분야인 메카노바이오, 오가노이드 등을 초격차 기술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전략도 발굴·고도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전략에 따라 정읍과 전주, 익산을 세 축으로 하는 삼각벨트 체계를 통해 차세대 첨단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선도 지역 도약 준비**  
수소경제는 국가·사회·국민생활 전반에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 산업구조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 '전북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수소경제 이행,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수소용품, 연료전지 분야 인프라 구축(3개소, 890억

원)과 수소생산기지(2개소, 365억원, 3.4톤/일 생산) 확보, 수소도시(전주·임주, 부안) 조성을 추진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2030년까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기업·기관 집적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제2차 전북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25~35년)'을 수립하여 단기(5년), 중장기(10년)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수소산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내 수소경제·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무인이동체 종합 실증단지 구축**  
광활한 새만금은 드론, 무인 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등 첨단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험장이 될 것이다. 무인이동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이 산업육성 방향 관련 과제를 연구 중이며, 올 연말까지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내 무인이동체 대규모 국책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산업의 성장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인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진흥에도 노력한다. 지속 성장하는 자동차 대체 부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지원센터' 구축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대체부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대체부품 산업 육성에 총 255억원을 지원, 19개 대체부품 인증기업 육성과 164억원의 대체부품 판매 수익을 달성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생산 대체부품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올해 1월 설립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북지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상호인증 체결 등 해외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향후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선점을 위해 대체부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등을 통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택일 미래산업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산업 생태계에 대응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등 전북자치도의 신산업지도를 바꾸겠다"며 "지속적인 주력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통한 특례 이행을 미래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장 제주자치도 찾아 정책 협의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전주12)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 정책 협의를 가졌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주 중문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및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제주의 면세점 사업 운영 현황과 마케팅 전략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 타당성 등을 논의했다.

제주관광공사와 JDC는 지역 관광산업 진흥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역점 추진사업들을 설명했으며, 특히 전북의 관광산업 진흥과 특별자치도 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대규모 사업추진 전략 구상에 공조해 줄 것을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어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특례와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전북특별법 1차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의회 관련 특례의 논리 보강 방안 및 신규 특례 발굴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의회 관련 특례 공동 발굴 및 지속 협의를 통해 상호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만호 기자



여아가 합의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 특검법, 야권 주도로... 이태원특별법은 여야 기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기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정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동안 구태 회의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기결했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

의하고 국회 통과 여부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결 3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를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담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었다. /뉴시스

### 전북자치도의회, 맞춤형 육아지원 성금 전달

#### 시도의회의장협 정책사업 일할... 큰누복지관에 5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장 국주영은)은 2일, 저소득가정의 맞춤형 육아지원사업에 써달라며 큰누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정 50가구를 선정해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육아지원 꾸러미를 제공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바우처 제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갱신하는 등 현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이 큰 상황이다"며 "특히,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어려움



을 겪는 저소득 아동 양육가정은 돌봄부재 및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저소득 가정의 자립을 위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윤준병 의원실, 총선 기간 불법여론조사 진행의심업체 수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의실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썬비전코리아(포털신문)'를 지난 달 30일 정읍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2일 밝혔다. 이미 총선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요청한 배경에는 지난 총선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했다고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주민들의 민심이 왜곡되는 행위를 바로잡고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조합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민심의곡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윤 의원의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맞춤형 과학선거 컨설팅, 유권자 DB와 읍면동단위 선거정보 제공' 등을 제안하며,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명부와 선거인명부, 유권자 세대별 전화번호 등도 컨설팅을 명분 삼아 제공하는 것으로도 의심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홍보 내용을 보

면,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2~3회의 여론조사와 경선전략 수립을 위한 선거구 대의인 2~3회, 해당지역 유권자에게 1회, 지지도 추이분석 및 당선가능성 예측 및 열세·우세 지역 상세 파악을 위해 해당지역 유권자에게 4~5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세부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외에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공 받은 가상번호만을 규정대로 활용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자체적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여론조사를 왜곡했는지 여부, 12회의 공개·비공개 여론조사가 진행됐는지 여부, 여론조사 비용의 조달과 정은 적정인지 여부, 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 수사 요청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전북대 총동창회, 총선 당선 동문들과 발전방향 논의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는 지난 1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전북대 출신 동문들을 초청, 대학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대 출신으로 김윤덕(회계 06), 신영대(경영 85), 안호영(법전원 05), 이원택(화학공업 87), 진성준(법학85) 등 모두 5명의 동문이 당선된 영예를 안았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대·진성준·이원택 당선인이 참석해 최병선 총동창회장과 양오봉 총장, 송철규 연구부총장, 백완기 재경총동창회장, 김대길 전북대서울사무소 특임교수, 이재준 총동창회 사무총장, 차은주 재경동창회 사무총장, 김준호 전북대논인회 회장 등과 함께 만찬을 나눴다. 특히 이날 만찬에서는 전북대 총동창회가 당선 동문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동문 당선인들은 저마다 소감을 통해 모교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 남원시의회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 정령치 현지 답사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대표 한명숙 의원)는 최근 지리산 정령치 습지 일원에서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답사는 남원시가 보유한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시 환경과,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시 지리산 생태관광지역협의회 등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23년 환경부가 주관한 국가생태관광지역에 선정된 지리산 정령치 습지 일원을 둘러보며, 생태습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남원=김기주 기자